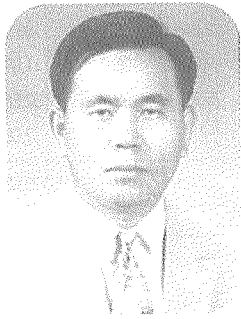


공직자가 사업자의 입장에서 규제개혁에 앞장을!



박 재 인
(본회 진흥담당 상무)

대망의 새천년 새시대가 열렸다. 새시대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이자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이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라 함은 기업이 이러한 수단을 통해 그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으나 없느냐에 따라 그의 존폐가 갈리는 사회를 말한다.

정부 또한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지 않고는 기업, 즉 경제를 살려나갈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이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적응해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고 어떻게 무한경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떻게 정보화로 그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혁명으로 미디어의 융합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산업사회는 한층 더 복잡다양화되어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의 역기능 현상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해진다.

따라서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각국은 이미 1980년대부터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가 산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어 왔고, 우리나라도 1990년대 중반부터 규제완화를 정책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 전자산업의 경우도 그 동안 이동무선전화기 등에 대한 기술기준확인증명제도 폐지, 전자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단축 등의 규제가 축소 또는 폐지되어 상당한 성과를 얻어냈다. 그러나 전경련이 조사한 기업활동 규제완화 대상 과제가 큰 책으로 엮어질 만큼 많았던 것에 비하면 개선된 것은 아직 미미해 규제완화가 많은 기업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한다.

막상 우리가 규제완화를 위해 현장을 다녀보아도 이에 대한 공직사회의 의식은 긍정적인 그룹도 있지만 부정적인 그룹도 있어 문제해결이 용이하지 않겠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또한 우리가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것은 규제완화를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소비자보호, 저작권 보호 등의 시대적, 사회적 요구를 명분으로 내세워 새로운 규제의 도입이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폐전자 제품에 대한 예치금제도, 전자렌지 등에 대한 에너지등

금관리제, 전자과 내성 규제, 사적복제 보상금제 도입 추진 등이 바로 그러한 것들이다.

미국이 규제완화를 위해 공동연구개발 등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완화, 멀티미디어화 현상에 따라 지역전화 회사 등에 CATV사업 허용, PAY TV에 대한 요금규제 삭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는 기본적으로 시장경제 주의에 반할뿐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정경유착에 빌미가 되어 왔다.

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처럼 복잡다양화된 사회에서 모든 것을 정부의 규제로 관리, 해결해 나가려는 방법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게 되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이러한 규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게되면 언제, 어디서 어떤일이 일어날지 몰라 사회불안의 요소가 되고 규제에 스스로 따르지 않는자가 오히려 유리해지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실제로 얼마전까지 전자제품의 무상수리 서비스, 즉 품질보증의 기간을 무리하게 2년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지키는 기업은 엄청난 A/S비용이 발생되어 견디기다 어려웠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은 관계당국에서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게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정부도 규제완화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그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게 나타나는데는 관계부처간에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과 공직사회의 과잉책임론 내지는 기업에 대한 지나친 불신 등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예컨대 소비자에 대한 품질 보증제도도 규제방식의 정부 관리체제 보다는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보증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품질과 서비스를 경쟁의 요소로 삼아 이것이 좋은 기업이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시장기능에 맡기고 정부는 필요한 경우에 피해 소비자에 대한 보상책만 강구하는 쪽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본다.

무조건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같은 규제관리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그 역기능이 너무 큰 만큼 가능한 한 시장기능에 맡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민간 전문기관들에 의해 감시하고 관리해 나가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규제의 도입에 있어서도 그 명분, 즉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 즉 규제에 의한 방식으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만일 시대가 변화될 때마다 새로운 명분을 내세워 계속해서 규제를 도입해나가는 논리라면 규제완화는 구호에만 그칠뿐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어 우리기업의 경쟁력은 상실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막대한 비용 또한 국민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제 새천년, 새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가 규제완화의 참뜻을 이해하고 사업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규제를 혁파해 나가는데 앞장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제2의 경제도약의 위업을 이룩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금 우리 전자·정보산업의 경우는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의해 인류사회를 주도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또 디지털 기술혁명으로 융합화된 멀티미디어 산업사회를 선도해가고 있는 만큼 규제완화가 더 더욱 시급한 산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